

**Vol. 3**

2025.03. 17.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7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 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 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 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소영은 전임 yesoh@hjcustoms.co.kr

##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화장품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化粧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化粧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8조(化粧품 안전기준 등)	⑥ 化粧품제조업자, 化粧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 1 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제10조(化粧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化粧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化粧품의 외부 포장에는 (이하 현행과 같음)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化粧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3) 시행일

25.02.07.

## I. 법령 개정사항

### 2.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 연장(제31조제7항제4호나목):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납세신고를 하도록 함.

나.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제136조):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관에 필요한 사항의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함. 또한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성명 및 상호와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 등 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구체화(별표 3 제70호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 (3) 시행일

25.02.28.

## I. 법령 개정사항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25.02.28.

## I. 법령 개정사항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과도한 과태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범위 확대(제 38 조제 1 항제 15 호 신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 재무상태표'를 추가함.

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자산의 거래(제 75 조제 3항 및 제 4 항 신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범위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특정전자화폐상품,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암호화자산의 교환 또는 이전 등으로 정함.

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조정방법(제 101 조제 2 항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기준인 연결매출액은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 비경상수익과 투자에 따른 순이익을 가산하고,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하여 산출하도록 함.

라.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제 113 조의 3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대신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뺀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 147 조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1)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 합계액의 '20 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 퍼센트'로 완화하고, 최대 '20 억원'에서 '10 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 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 퍼센트'로 완화함.

### (3) 시행일

25.02.28.

## I. 법령 개정사항

###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 20606 호, 2024. 12. 31. 공포, 2025. 4. 1.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비용이 높은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5 년 6 월 30 일까지 한시적으로 5 퍼센트에서 3.5 퍼센트로 인하하며,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 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25.02.28.

## I. 법령 개정사항

### 6.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20248 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 기재하는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 시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25.02.07.

## I. 법령 개정사항

### 7.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효율적인 인증수출자 관리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인증수출자 인증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범위 및 인증신청 관할세관 정비

#### (2) 주요 내용

가. 관세법 제 233 조의 2 에 규정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추가(§3의 2①)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시 현지확인 지원업무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업무

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24.7.2) 및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 ('24.12.31)에 따른 고시 정비

- 직제 개편 및 관세청장이 조정 시행하는 기능별 관할세관 일부 수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관할세관 정비([별표 1])
-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의 인증신청 관할세관을 서울세관에서 평택세관으로 변경(직제 개편)
- 천안세관, 청주세관, 대전세관의 관할구역의 인증신청 관할세관을 서울세관에서 평택세관으로 변경(기능별 관할세관 조정)

#### (3) 시행일

25.02.12.

---

## I. 법령 개정사항

### 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국제수출통제 공조 강화 및 수출통제 제도 개선

#### (2) 주요 내용

가.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에 따른 전략물자 추가 지정

나. 대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시 상황허가 면제

다. 대외무역법('24.2 월) 및 시행령(10 월)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개정

#### (3) 시행일

25.02.28.

## I. 법령 개정사항

9.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 2025-5 호)

## (1) 부과 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 3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래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2)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형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형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7.55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5.66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45
	4. 그 밖의 공급자	5.66
대만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켄(Arochem Corporation) 나. 원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7.07
	2.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2
	3. 그 밖의 공급자	7.07

라. 부과기간 : 2025. 2. 21. ~ 2025. 6. 20. (4 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3) 부과 기간

25. 2. 21. ~ 25. 6. 20. (4 개월)

## I. 법령 개정사항

### 10.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첫째,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외환거래 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통합계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둘째,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함.

셋째, 외환거래 당사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지급절차를 정비·통합하여 거래당사자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규정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넷째, 글로벌화·선진화된 우리 경제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도록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관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다섯째,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 상계신고 예외사유 추가 등 기타 외환제도와 관련하여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지급절차 정비 및 간소화

- 별도로 규율되던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각각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절차로 통합
- 이에 따라 기존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와 관련된 조항 수정

##### 나.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

- 증권사가 증권사 본인 명의 거주자계정을 통해 고객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은행에 본인 명의 외화계좌가 없는 국민도 증권사 일반환전을 통해 외화 현찰을 수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투자 애로사항 해소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 지원

- 국제예탁결제기구 또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외국인투자자의 증권 매매대금 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 개설 허용
- 통합계좌를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 또는 글로벌 수탁은행에 대해 증권결제 실패 방지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 허용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증권투자 외에도 수출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국내은행에 개설된 업무용원화계정을 활용하여 비거주자의 경상거래와 증권거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용원화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처분사유 신설

라.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축소

- 계약건당 미화 10 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입대금을 물품 선적 전 1 년을 초과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 부여
- 선박, 철도 등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마.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완화

- 1 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기준을 5→10 만불로 상향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를 통해 관리
- 투자업종 상관없이 300 만불 이하 투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 면제
- 현지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에 대한 사항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대상에서 제외

바. 해외지사 설치·운영·사후관리 방안 정비

-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를 자유화하되 해외 지점·사무소에 대한 송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모니터링·관리

- 해외지점의 독립·비독립채산제 구분을 폐지하고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의무 면제

기타 : 내국수입유산스의 범위 확대, 상계신고 예외사유 추가 등

- 은행의 수입인수금융 관련 차입금도 내국수입유산스에 포함 →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국내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징수한 선박임과 지급한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여 외국 선박회사와 지급·수령하는 경우 상계신고 대상에서 제외

-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선도은행의 시장조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예금성외화부채 공제액의 산정방식 변경

### (3) 시행일

25.02.10.

## I. 법령 개정사항

### 1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

#### (1) 공고 이유 및 주요 내용

2025 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 관세법 등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제한 ]

(대 상) '24 년 세관검사 결과 1 회 이상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적용기간) '25. 3. 1. ~ '26. 2. 28.

※ 검사비용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는 실시하지 않음

#### (2) 시행일

25.03.01.

## II. 입안예고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대용 약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4 및 6)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되어 마약류로 관리하고자 하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등 7 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 (3) 의견수렴기간

25.04.10.

## II. 입안예고

### 2. 「관세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채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되는 주류의 기존 기준에서 병수 기준(2 병)을 삭제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율의 하향 조정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하게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해외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함.

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2병) 폐지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인 병수 2병을 폐지하여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도록 개정함.

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인하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현행대비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마. 원산지증명서 발급 운영 사항 규정  
법 제23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요청 기한 규정을 신설함.

바. 채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서식 신설(별지 제76호 서식)

## II. 입안예고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물품에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II. 입안예고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정보제공명세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II. 입안예고

### 5.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약사법」 제 42 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 60 조의 2 에 따라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등을 정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중 해외제조소 관리자 등 변경내용에 대하여 매년 제출하는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해외제조소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매년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에서 ‘매년 1 월 31 일까지’로 일원화함(안 제 4 조제 2 항)

## II. 입안예고

### 6.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식품안전정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하고,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중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위탁운영기관과 담당부서는 검증계획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안 제 6 조)

나. 운영부서의 장은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수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신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 30 조제 1 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 조)

다. 전자심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자심사 협의회(총 20 인 이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 조)

### Ⅲ. 조세심판사례

## 1.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1.5.4.부터 2021.7.30.까지 A 공화국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①” 또는 “B”이라 한다) 및 C(이하 “쟁점수출자②” 또는 “C”라 하고, 쟁점수출자①을 포함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 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 호 외 4 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A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A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2022 년 9 월부터 2023 년 6 월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 17 조에 따라 쟁점물품이 한-A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A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한·페루 FTA 및 관련 국내 규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원산지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15 일전에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 등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출자에게 서면이 아닌 E-mail 로 원산지 조사를 통보한 것에 잘못이 없어 보기 어려움

### (3) 결정일

2025.01.06 (조심2024관0073)

### Ⅲ. 조세심판사례

2. 청구법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 만을 배송지연을 사유로 물품대금을 환급받은 경우, 관세법 제 106 조의 2 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2024.7.8.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A(이하 “A”라 한다)를 통해 구입한 ‘스마트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 개를 수입신고번호 000M 호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청구인은 2024.8.21. A 로부터 배송지연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대금을 환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위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8.28.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 106 조의 2 에 따른 관세환급 절차를 안내하였음.

다. 청구인은 2024.9.6.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이하 “쟁점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2024.9.12. 쟁점신청 시 구매 및 반품 확인서류 등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자료의 미제출을 사유로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은 입증자료 제출 요구 등에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다고 불만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3) 결정일

2025.02.06 (조심2024관0143)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식약처, 올해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공급 대상 19,168개 품목 공고
-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 소량포장 공급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2월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업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이며 재고량 3% 초과 품목 등

<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현황>

제형	공고 품목 수	소량포장단위
정제	16,335 개 품목	날알모음포장: 100 정·캡슐 이하 병포장: 30 정·캡슐 이하 500mL 이하
캡슐제	2,724 개 품목	
시럽제	109 개 품목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체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한-미 FTA에 따라 對美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대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2.14일(우리시간)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신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우리 관세율을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약 13.4%(World Tariff Profile, '24.7월)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도 '07.6월 FTA를 체결('12.3월 발효)하였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4년 기준으로 0.79% 수준(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3. 미국의 상호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 - 미국의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13(목,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4(금)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하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4. 미(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 통상교섭본부장,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과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없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proclamation) 관련, 2025년 2월 11일 15시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에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정 본부장은 현지시간 2월 10일 발표된 미국 대통령 포고령에 따르면, 기존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관세의 면제 또는 쿼터 적용이 사실상 폐지되고, 원래의 관세로 회귀하는 조치가 3월 12일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쿼터 폐지에 따른 철강업계 대미수출 여건 변화 및 품목별 시장 경쟁력 분석 등 대응방향을 업계와 논의하였다. 정 본부장은 “미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업계도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는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 계기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美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5. 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하는 정보 제공한다

- 관세청, 수입기업·관세사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성화하여 신고오류 최소화

관세청은 2.20(목)부터 수입기업·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도움정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내용 중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 위임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하여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로 발생 빈도가 높으며,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추징되어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건강진단을 통해 우리 몸이 큰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는 것처럼,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납세진단을 통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6.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3년 12월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http://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 주요 경과: (‘23.12월) 협상 타결 → (‘24.2월)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24.下) GCC측과 협정문 영문본 공동 검토·확정 → (‘25.2월) 한글본 초안 마련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GCC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7. 무역위, 열간압연 후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 건의 결정
- 제457차 무역위원회 4건 안건 의결,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와 재발 방지 조치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월 20일(목)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이하, 평판압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2차 재심사)」(이하,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무역위원회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평판압연과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판정하고,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연장(원심 3년 → 재심 5년),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 가격약속 :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 등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음(관세법 제54조)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하여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8. 수출역군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뛰는 산업부

- 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 긴급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119’ 운영
-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협약 210건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월20일(목) “‘25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월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23년부터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시험연구원 및 수출지원기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부와 합동으로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을 위해 운영 중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인증119(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를 운영하여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 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9.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에 따른 전략물자 추가 지정
- 對러시아 상황허가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8일(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작년 12월 초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되어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 전략물자 지정 대상 >

(양자컴퓨터 분야)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등

(반도체 분야) S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등

(기타 분야)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S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❷ 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하여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 의료기기(예시) : 진단용 X-Ray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02-6000-6498, 6499)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0. 미(美) 정부와 관세조치 등 통상현안 논의

- 상호관세 등 관세조치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
- IRA,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대미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17(월)부터 2.20(목)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백악관, 상무부, USTR 등 정부 관계자,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하였다.

박 차관보는 美 백악관, 상무부, USTR에 양국 간 긴밀한 경제관계 및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박 차관보는 이와 관련,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美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한편,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1. 식약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에토미데이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선제적, 적극적 관리
- UN 통제물질 지정 대상 및 오남용 우려 물질 마약류 신규 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 수행

\*\* (마약)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종, (향정) 헥사히드로칸나비놀

\*\*\* (향정)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되었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지정이 국제사회 마약류 규제와 조화하는 동시에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